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음 2월 7일) 제20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대통령 개헌안 '4년 1차 연임제' 채택

### 靑, 권력구조·헌법기관 권한 등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4년 1차 연임(連任)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3면>

관심을 모았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포함도 포함됐다. 1차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고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1차투표 시점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

현행 헌법의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논란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맞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사법제도 개선 부분에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도록 했다. 일반법관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또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 회의로 이관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최근에 법원에서 나타난 여러 모습에서 보듯 임기제가 사법행정에 의한 법안 통제수단으로 역기능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국민 재판 참여 확대를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배에 따라 배심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하기로 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토록 했다. 비상계엄 아래에서의 단심제 규정은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폐지했다. /김진성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22일 전주 혁신도시 내 키즈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를 방문해 추진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 전주혁신도시에 공공시설 만든다

시, 공공시설 건립방안 확정  
2021년까지 키즈센터 등 건립

최고 수만 명이 입주했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전주혁신도시에 키즈카페와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터, 안전체험교실, 청소년 전용공간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키즈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선다.

또 혁신도시에는 수영장장과 체육관,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과 혁신동 주민문화센터도 건립된다.

이와 함께 입주가 시작된 송천동 에코시티에도 정주여건 개선과 키즈복합센터와 주민문화센터, 복합체육시설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혁신도시 내 키즈복합문화센터와 혁신동 주민센터, 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등을 잇달아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에코시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혁신도시 내 3개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각각 키즈복합문화센터와 복합체육시설, 혁신동 주민센터를 건립한다.

우선 전주온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주온빛중, 양현고 등 초·중·고

교와 다양한 학원이 밀집된 장동 1088-2 일원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800㎡ 규모의 키즈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

이곳을 어린이도서관과 장난감도서관, 체험 공간 등 책과 함께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가족단위 혁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체험·문화 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만성지구와 혁신도시를 잇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근 장동 1114 일원 부지에는 오는 2019년까지 총 11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900㎡ 규모의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다.

상가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중동 852 일원 부지에는 오는 2021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300㎡ 규모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혁신동 주민센터가 건립된다. 혁신동이 신설되는 오는 7월부터 주민센터가 완공되는 오는 2021년까지 공간을 임대해 임시 청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에코시티 중심지에는 오는 2021년까지 약 21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00㎡ 규모의 복합커뮤니티 공간

을 조성한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 공간에는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실내수영장과 함께 키즈카페와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터 등의 기능을 갖춘 키즈복합센터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또한 계획인구 3만 2003명의 에코시티 입주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송천1동과의 분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향후 문화센터와 동 주민센터 사무공간, 회의실 등의 기능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담을 예정이다.

시는 향후 혁신도시·에코시티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보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보육시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같은 신도시에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은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보육공간과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을 확충해 정주여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고 싶은 도시 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국가원수' 지위 삭제... 총리, 대통령 임명 유지  
감사원 독립기관화... 위원 3명 국회에 선출권  
헌재소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재판관 중 호선  
선거연령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 헌법 보장

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도 강화했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개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했다.

추기 위해 이번엔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을 국회에 선출권을 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현재는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이와관련 "이것을 확보하는 데는 정부가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며 "정부 제출 권한이 무제한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 매일 INDEX

4면 - 수달 서식지에 수달 발견

5면 - 물의 소중함 일깨우다

6면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통과 현장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과 부안의 미래를  
주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어화세상 벗님네야~ 복받으러 부안가세~"

2018.5.5(토)~5.7(월)

Festival site\_ Jeollabukdo Buangun

제6회  
부안오복  
마실축제

2018 6th BUAN OBOK MASIL FESTIVAL

\*주관 부안마실축제추진위원회  
\*후주주최 부안예술회(신해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 11)  
전북 부안군 일원(주최시장부안읍)